새정치, 전략공천보다 경선…7～8명 물밑 움직임

광주 서구을 4·29 보궐선거 누가 뛰나

지역위원장 조영택 유리한 고지 확보
김하중·천정배·이용섭·강운태 등 거론
오병윤 무소속 재출마 여부 최대변수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림에 따라 통진당 오병윤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광주 서구 을에서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오병윤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4·11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에 따라 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를 간발의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광주 지역의 정치적 특성상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만큼 공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내년 2월 전대에서 선출된 지도부가 전략공천과 경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전략공천보다는 경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궐선거 특성상 전략공천 가능성도 있지만 전대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앞 다투어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공약으로 내 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7월 보궐선거에서 광산 을 권은희 전략공천 카드가 지역 민심의 이반과 함께 전체 보궐선거 판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구 을 후보군 가운데서는 지난달 지역위원장에 선출된 조영택 전 국회의원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조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과 국무조정실장, 행자부차관 출신으로 광주에서도 비교적 중도·보수적 표심을 보이고 있는 서구 을 민심 성향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조 위원장과의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하중 중앙당 법률위원장도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치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조 전 의원을 바짝 따라붙어 만만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광주에서 '호남의 희망'이라는 사무실을 내고 정치 행보를 재개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행보도 관심사다.

6·4 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에서 중앙당의 전략공천에 반발, 무소속 출마에 나서 뜻을 이루지 못했던 이용섭 전 국회의원과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도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 민심이 지역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송갑석 전 전대협 의장 등 개혁을 상징할 수 있는 인사들의 중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에도 무소속 출마의 길이 열린 만큼 오병윤 전 의원의 재도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오 전 의원이 직접 나서기 어려울 경우 진보 진영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보선에 나서 당 해산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지역민의 심판을 다시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어떤 후보를 내놓을 것인지도 관심사다. 지난 7월 순천·곡성 보궐선거에서 이정현 의원 당선의 기세를 모아 이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새누리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을 지낸 조준성씨가 출마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조 씨외에도 중량급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지만 마땅한 후보군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난관이다.

지역 정치권의 관계자는 "새로 선출된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광주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 공천에 고심을 거듭할 것"이라며 "투표 결과에 따라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지역 민심의 흐름도 읽을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재연(왼쪽부터)·이상규·오병윤·김미희 전 의원들이 21일 국회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진당 비례 지방의원들도 의원직 상실 위기

광주·전남 5명…지역구 지방의원 13명은 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

통합진보당이 헌재 결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 등 거취가 주목된다.

광주와 전남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 18명이 활동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사는 광역·기초 단위 비례대표 의원들이다. 정당 비례대표인 만큼 통진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대체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시의회 이미옥 의원과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 등 2명이 광역의원 비례대표다. 기초의회 비례는 순천시의회와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각 1명씩으로 광주와 전남 통진당 지방의원 비례 대표는 모두 5명이다.

지역구 지방의원은 광주·전남에 광역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고, 기초의원은 광주가 서구의회와 북구의회가 각 3명, 광산구 2명, 남구 1명으로 9명이다. 전남은 순천시의회 2명, 광양시의회와 화순군의회가 각 1명씩으로, 지역구 지방의원은 13명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관련 법 해석을 거친 뒤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이 모두 37명이다.

이와 관련, 광역·기초 단위 비례대표 의원들은 통진당에 대한 해산 명령이 내려진만큼 비례대표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겠느냐고 관측하고 있다.

다만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법무부에서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언급이 없었을 뿐더러,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선관위 판단 사항이 아니어서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의 의원직 유지가 타당한지 논란이 이는 분위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선거때마다 돌풍…광주·전남 새정치 독주 견제

김선동 파동·부정경선·종북 논란…14년 역사 마감

통진당 탄생서 해산까지

지난 2000년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창당으로 시작된 통합진보당(통진당)이 지난 19일 헌재의 해산결정에 따라 14년간의 '질곡의 역사'를 마감했다.

통진당은 광주·전남에서 민주당의 견제·대안 정당역할을 해내며 지방의원 최대 배출지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김선동 전 의원의 '국회 최루탄 투척', 이석기 의원 파동 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헌재의 해산 결정에 따라 더 이상의 정당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통진당의 뿌리는 14년 전 탄생한 민노당이다. 2000년 언론인 출신 노동운동가인 권영길씨가 현장 노동운동가를 중심으로 민노당을 창당하면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도 각각 1명씩의 비례의원을 탄생시키며 호남에서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어 같은 해 대선에서 득표율 3%로 가능성을 확인한 민노당은 2년 만에 돌풍의 핵으로 변모하고, 17대 총선에서 13.1%로 무려 10석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광주와 전남에 11명(광주 8명·전남 3명)의 기초의원을, 1명의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배출하면서 그동안 광주·전남에서 '1당 독주'제제였던 민주당의 대안·견제 정당으로 떠올랐다.

이어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민노당은 광주·전남에서 총 39명의 광역·기초의원을 당선시키며 전국의 '진보정당 1번지'로 떠올랐다. 광주에서 첫 지역구 시의원 1명을 배출했고, 전남에서는 2명의 지역구 도의원이 당선됐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광주에서 10명, 전남에서 14명이 당선되면서 광주·전남에서 통합진보당 '돌풍'을 일으켰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1년에는 국민참여당, 진보정의당과 합당하면서 국내 유일의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통합진보당을 탄생시켰다.

통합 이후 2012년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13석을 얻으며 원내 3당으로 도약하면서 진보정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순천·곡성 지역구 김선동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파동과 이석기 의원이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부정 경선 의혹이 불거지면서 다시 위기를 맞게됐다.

이 과정에서 종북세력 논란까지 겹쳤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가 발생해 2012년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으로 다시 나뉘어졌다. 그리고 이석기 의원이 지하 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 지목된 내란음모 사건이 터지면서 정당 해산 심판으로 이어졌다. 결국 헌재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 만에, 그 뿌리인 민노당 창당 14년 만에 강제 해산의 길을 걷게 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